

한국 정당의 공천파동에 따른 선거 결과 함의 :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논문요약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용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주제어: 제20대 총선, 선거 결과, 정당의 공천파동,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 이 논문은 2016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I. 서론

2017년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단행한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결의(제20대 국회 재적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해 소추의결서의 청와대 도착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로 넘겨진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에서 이미 그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탄핵의 표면적 이유는 대통령이 특정 사인(私人)을 통한 국정농단, 이른바 대통령 재임 중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은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당내 공천파동으로 탄핵에 이르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행태는 친박 대 비박 간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지어졌다. 이후 이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이 분열되면서 非朴은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새누리당마저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게 된다. 그런데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 만이 공천파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공천파동을 겪었으니, 여야 정당이 정당정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천경쟁에 목숨을 건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한판을 벌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중심으로 한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행태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20년만의 '3당체제', 16년만의 '여소야대'가 이뤄지면서 사상초유의 이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체제로 국회가 원내교섭단체로 운영되는 것은 제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이후 20년만이며, 여소야대(與小野大)는 제16대 국회 이후 16년만이다. 정당별 당선자의 최종 의

석수(지역구+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22석(105+17), 더불어 민주당은 123석(110+13), 국민의당 38석(25+13), 정의당 6석(2+4), 무소속 11석이다. 게다가 막판에 박근혜 정부 및 집권 새누리당에 대한 응징과 야권표 결집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하고 정당투표가 국민의당에 몰린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분열과 집권 프리미엄으로 150석 '과반의석'을 넘어 180석까지 내심 노렸으나 참패할 수밖에 없었고, 전체 의석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1석이 뒤졌다. 여당의 여유있는 승리와 야당 중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참패가 예견¹⁾되었던 선거전 분위기와는 달리 새누리당은 과반은커녕 수도권에서 참패했고, 경남과 부산에서도 야당에 의석을 내줘 제1당 마저 1석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전체 122석의 3분의2에 달하는 80여 곳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호남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밀어내고 원내1당으로 등극했으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승리로 23석과 수도권 2석 그리고 비례대표 13석까지 38석을 얻으며 약진했다.

여야 간 4·13 총선 화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失政)과 새누리당의 여당프리미엄과 오만함 외에 국민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보다는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의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른 대선판도를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결전이었다.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을 외쳤고, 야당은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생산적인 국회 운운하며 제19대 국회를 비판했다. 제1야당이 분당돼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인지라, 새누리당이 개헌 가능선인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신생 국민의당은 제1당과 제2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유권자의 표심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오만한 공천행태에 대한 심판이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당 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했으며, 핵심법안 처리는 물론 국정운영과 후계구도에 상당한 차질을

1)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예견은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대표의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과 문재인 대표의 2선후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 등 총선전 집권 새누리당에 비견되는 당 내분과 분열에 있었다.

빛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으로의 등극과 국민의당의 약진은 여소야대 국화를 만들어 새로운 정치판도를 예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총선 기간 내내 정치권의 ‘핫이슈’ 중 하나였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절대적 승리를 가져와 개헌 문제 및 보수정당의 권력승계로 체제유지를 꾀하려고 했으나, 당내 민주화 부재로 공천파동을 자행해 총선 참패로 이어졌으며 차기 대권후보 구도에 난맥상을 노출하게 되었다. 집권여당의 활로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친박, 비박하며 공천파동을 초래한데서 오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천파동의 행태는 여야 당이 공천(公薦), 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계파간의 이전투구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표심을 자극했는지를 보여주는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의 행태를 중심으로 빚어진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행의 행태가 제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견하는 척도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4·13 총선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여하튼 이번 총선과정에서의 특징은, 제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 전 초선 양상을 띠었으며, 여야 기득권세력들이 국민의 민생문제에 대한 공약을 선점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획득에 함몰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각 정당의 정책과 이념이 실종되고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오로지 각 정당의 계파별 공천이 파행으로 점철되면서, 유권자인 국민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실망스런 막장 드라마식의 공천파행이 과연 생산적인 국회로 변모되리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²⁾ 달리 말하면 각 정당은 대선을 앞둔 길목에서 계파공천을 해놓고 국

민들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식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인 총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차체에 이러한 계파공천에 의한 선거결과가 제19대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후보자 공천파행을 초래한 집권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이 해당된다. 물론 정의당의 경우 선거결과 제4당에 위치하고 진보정당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개괄이 필요하나, 논제와 달리 공천과정에서 파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논문의 구성으로 당내 민주화가 부재한 여야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을 살펴보고,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와 그것이 선거에 미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현황

정당은 공천(公薦)이라는 이름으로 공직후보자를 내세우며 선거에서 유권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정당의 공천 방식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정당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혼전을 벌이지 않으면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도식적으로 보면, 정당은 특정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공모→ 후보자 응모→ 정당의 인물추천→ 정당 후보자 선정→ 유권자의 투표 순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데 최대의 역점을 둔다. (조일문 1971, 37) 그러면 유권자는 다수 정당, 다수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결정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식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정당의 인물 추천인데, 대부분 자당(自黨)에 유리한 후보군을 비밀리에 혹은 자의적으로 범조계, 학계,

2) <http://blog.daum.net/jjsyes/19>;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74136> (2017. 2.19. 검색)

예능계, 여성계, 노동계, 장애인 등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대상으로 추려낸다. 그렇다보니 여야 정당은 말로만 공천기준을 불특정 다수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공천을 한다 해놓고서는 오히려 당 계파별 나눠먹기식의 후보로 결정하는 비민주적 공천 관행 방식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박찬욱 2000, 310)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민주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계파 나눠먹기라는 사사로운 결정을 내세워 유권자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후보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당내 민주제도가 확립되고 자유공정타협 등의 원칙을 존중한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대의제도의 원칙 및 당내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학계에서도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당의 공천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당 공천의 민주화를 많이 기대해왔다. 주로 공천의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틀을 내세웠다. 특히 후보의 자격, 선정의 주체, 분권화의 정도, 선출 혹은 지명 등 라하트와 하자(Rahat and Hazan 2001)과 하자(Hazan 2002)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들의 분석틀은 주로 18대 총선 공천에 대한 박경미의 연구(2008), 길정아·이하경(2009)의 연구, 17대 총선 공천에 대한 김영태(2004) 이현출(2004) 전용주 등의 연구 등을 대표적으로 사용했다.(이정호 2013, 29-30) 그 결과 대부분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요인(전용주 2005), 진성당원 없는 지도자 중심 공천(김용호 2003, 22), 특정인의 권력유지를 위한 공천이나 파벌 리더에 의한 당내 헤게모니 투쟁에 따른 공천(길정아 2011, 299-300), 지역주의에 기초한 당내 보스 내지는 파벌 리더 위주의 공천과 정치문화(이준한 2003, 104)를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가 공천의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공천의 파행을 당 보스나 파벌 리더의 행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정당이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건, 사회에서 비판받는 사람이건, 당내·외로 구태적인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천(私薦), 정실 공천, 계파별 공천, 밀실공천 해놓고 유권자들에게 선택해달라고 강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작금에 이르러 한국 정당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해 오고 있는 공천이 공천을 빙자한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즉 사천(私薦), 자천(自薦), 여론조사 경선 등이 선거판에

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당은 공천의 대가나 계파별 나눠먹기식의 공천 행태가 아닌, 즉 당내 민주화, 공정한 심사와 경선 및 합의를 통해 공직후보자를 선출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경쟁적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킬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주지하듯이 모든 선거의 공천은 정당이 반드시 후보자 전원을 경선에 부치되 중앙당 공식 방식을 지양하고 각 선거구 지역의 진성당원들만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공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현재 진보정당의 경우 대체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에 의해 민주적인 선출로 후보자를 내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일체도 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해 오고 있다. 그런데 소위 공당이라는 주요 정당들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많지 않다. 주로 선거 때 동원되어 온 1회용 들러리식의 비등록 당원이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명부용 당원이 주를 이룬다.

작금에 한국 정당의 공천 후유증 및 내홍은 비민주적 공천방식 때문이다. 과거의 정당들이 해왔던 방식이 구태의연하게 현재에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직도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정당 특유의 공천장사, 중앙당 이름으로 전략 공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비민주적 공천 방식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출 과정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려다가 쑥 들어가고,³⁾ 결국엔 정당들이 이를 당헌당규에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그 과정 중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밀실공천, 정실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천은 진성당원이 부재한 결과 당내 민주화에 따른 공직후보자 선출을 못하는 셈이다.

여야 정당은 현재 선거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공직후보자 선출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즉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대의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의 방식에 대한 논

3) <http://blog.daum.net/jjsyes/23>;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67261>. (2017. 2. 18 검색)

의가 부분하나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비민주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계파를 옹호하고 타계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직후보자를 나눠먹기식으로 선출하는 등, 유권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부정한 후보를 내세워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는데,⁴⁾ 어느 누가 공천권을 돌려달라고 한 국민은 없다. 공천권은 정당에 있고 선거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정당이 그 가치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이 원론적 의미의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것이 왜곡되고 있다. 상향식 프라이머리 공천 방식이나 안심번호제 공천방식은 역차별 투표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반드시 각 지역당의 진성당원들만으로 투표 결과의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민주적 공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진성당원이 많지 않다는 데에 이러한 공천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발상으로 국민경선제를 국민들에게 선포했으나 그나마도 실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꼼수’로 등장하는 것이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도 실시 기관마다 다르고 실제로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공직후보자 선출을 당의 이념이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보다는 여론조사 기법에 의존하여 선정하는 기계식 선출방식으로 공천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정당의 역할 중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재 정당의 권력관계가 후보 공천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야 좋은 싫든 한국 여야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대체적으로 자기동지 개념의 계파를 중심으로 한 공천이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가 가까게는 제20대 4·13일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제19대 차기 대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각 당 공천 과정에서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은 저마다 자신과 가까운 후보에게

4) 국민일보 2015/12/19.

공천장을 쥐어주고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당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이 제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름 하여 대선 승리를 위한 총선 공천에 대선 후보군이라는 사람들에 의한 사천, 자천, 전략공천, 정실공천의 작태를 보여준 것이다.

Ⅲ.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

제20대 총선은 불과 두 달 전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나가면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됐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분열로 선거판세가 여당에 유리한 압승을 예상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총선을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로, 정권심판론으로 몰아갈 의도였다. 허나 새누리당 공천파동 같은 외부변수가 더 크게 작용했다. 물론 야당의 공천파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 공천파동도 한 몫을 했다. 이처럼 여야의 공천파동은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권행보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제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공천파동 사례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편의적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순으로 그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권력승계를 통해 체제유지를 하고자하는 심정은 퇴임 후 후임자가 안정적인 정책을 계승하면서 영속적인 집권을 꾀하는데 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하면 권력승계에 단절을 가져오며 결국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가능케 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기간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 총선에 관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통해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총선에 거는 기대는 대략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여당 내에서 친박계의 승리에 관점을 두었다. 제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등 친박(親朴)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체 의원수 기준으로 볼 때 非박계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었다. 2014년 이후 이어진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잇따라 비박계가 승리하기도 했다. 친박계가 이번 공천에서 적극적인 현역 물갈이를 주장했던 배경이다. 둘째, 유승민 의원 같은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으나,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이나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해왔다. 유승민에 의해 독재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뒤통수 제대로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을 지칭하며 배신의 정치 척결을 운운하였다.⁵⁾ 셋째, 국정책임의 소재를 국회, 즉 야당에 돌리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계속 반복돼 왔음에도 실정의 탓을 국회, 야당에 돌렸다. 그러기에 공천과정도 이제까지의 국정수행방식,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 직접 개입이 어렵다 보니, 총선 관계자 및 선거구 후보자를 간접적으로 응원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가 박 대통령이 선택한 공천전략은 ‘진박’(眞朴, 진짜 親박근혜) 공천이었다. 부산에서는 현역이 한 명도 물갈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내각과 청와대 인맥을 내려보내 물갈이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대구에 출마한 진박 6인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진박 일색의 공천이 현실화됐다. 그러나 막상 공천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 공천 결과는 친박 또는 진박의 일방적 승리라고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재원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 역임한 3명이 모두 새누리당 공천장을 받지 못한 ‘정무특보의 저주’도 나타났다. 대구·경북(TK)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조운선, 강석훈, 김행 등 친박계

5) <http://blog.daum.net/jjsys/35>;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60043>(2016.03.24 (2017. 2. 20. 검색).

인사는 줄줄이 경선에서 패했다. 공천 칼날을 휘두른 친박계가 공천 작업을 통해 ‘상처뿐인 영광’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내각과 청와대에서 자천타천으로 발탁해 일단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현장에 투입했지만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이다. 둘째,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면서 공천 내내 친박 주도의 공천이란 인상을 줬다. 이번 새누리 경선은 한마디로 박근혜 공천이었다. 즉, 친박계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을 친박으로 모으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자신들의 의중을 관철시켰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다음 카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였다.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정치 위기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를 진박 감별사이자 마케터로 선거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넷째, 여기에 더해 당내 경선 막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곱지 않은 시선에도 당내 경선 개시 시점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강행한 것이다. 당내 경선 초반 진박 후보 대부분은 이러한 진박 마케팅의 혜택을 입었다. 다섯째,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살생부 낙취록 파문이라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에 임박해 터진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보람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진박 마케팅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선 막판 진박 후보 일부가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서울 강남 지역에서조차 탈락하는 참혹한 사태로 이어졌다.

더욱이 당청(새누리당-청와대)관계에서 수세적 입장에 놓여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박보다는 친박 쪽 진영이 수월하리라 보여진 것이다.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 조짐이 이번 공천과 무관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정치생명까지 건다고 했던 상향식 경선방식이 퇴색하면서 경선:전략공천을 6:4의 비율로 마무리 지었다. 그 부분에 저항하기 위해서 살생부가 등장하고 여론조사 유출이 있었고 결국은 낙취록까지 등장했다가 물밑으로 친박계와 김무성계 간의 합의가 되면서 봉합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과정에서 터진 공천행태는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 기득권세력 간 공천권 확보를 위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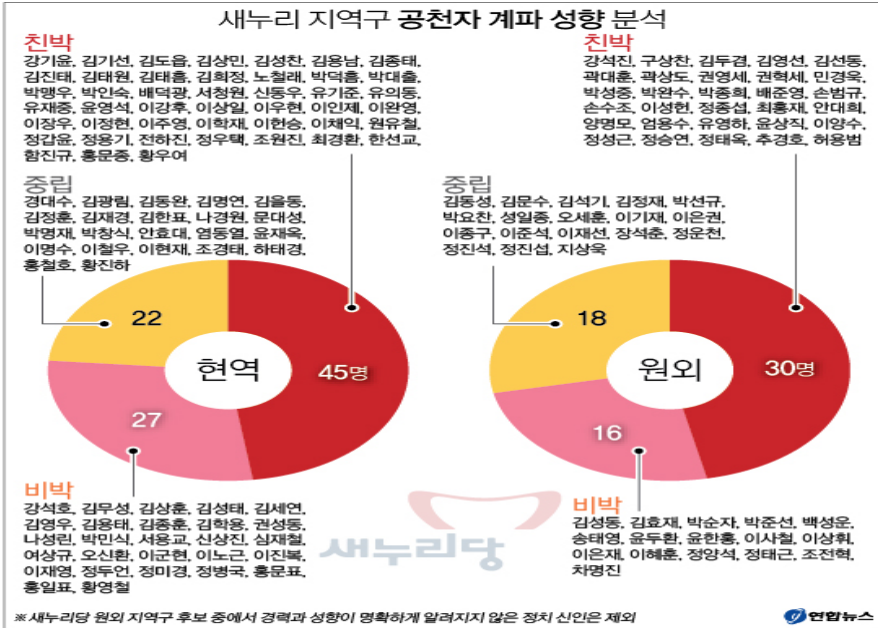
력다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 그 중에서 압권은 경선도 단수공천도 아닌,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였다.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은 사실 유승민으로부터 시작돼 유승민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민은 혼돈에 빠졌다. 대구에서 배출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특히 유승민 의원은 총선 등록 마감 직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유승민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기일 마지막 순간까지 내몰아서 유승민 의원이 나가면 다른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공당다운 행태가 아니다. 유승민 의원 한 개인을 가지고 스스로 탈당하라는 압시로 내몰면서 공천파행을 지나치게 집착했던 부분은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상 큰 실수라고 본다. 정녕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의 소위 ‘배신의 정치’를 내세워 박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 현저히 방해가 되었거나 당의 정체성이나 국정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다면 이재오 의원처럼 처음 공천발표에서 날려버리면 될 일이었다. 결국 새누리당은 '유승민이냐 아니냐'의 대립적 관점, 즉 유승민 공천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추태를 보여주었다.⁶⁾ 여기에 비박계가 대거 컷오프당하면서 친박 계가 주도한 밀실 보복공천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유 의원 본인은 후보등록 직전까지 공천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제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듯이, 친박이 휘두른 공천 칼날에 유승민계는 공천을 받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의 공천은 유승민 죽이기 공천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공당으로서 너무도 꼼수식의 또는 음모식의 공천을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냈다는 생각이 든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내려놓고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만 지연 시키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은 공천을 탈락시킨 적 없고, 본인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자기 발로 나간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연작전을 마지막 순간까지 편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졸렬

6) blog.daum.net/jjskips/20 (2016. 12. 3. 검색).

하고 음모적인 행태였다고 할 수 있다.



김토일 기자 / 20160324
 페이스북 tuney.kr/Lev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출처 : 연합뉴스 2016/03/24.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과 비박 의원들이 대거 '공천학살'당하고 친박 위주로 공천이 이뤄진 이번 새누리당 공천에서 조운선, 김재원, 윤두현 등 친박 의원들은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진박' 마케팅이 거꾸로 역선택을 하게 만드는 결과가 경선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즉 '친박'을 선택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 부메랑이 되어 역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공천과정이 비박계 의원들에게 비수를 두어 이들이 대거 탈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친박계 의원들의 탈락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이런 현상은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경북(TK)과, 여당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여러 지역구에서 경선참여자도 친박계 후보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비박계 후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의 총선 진영에서 축출됐다. 유승민 의원을 마지막까지 압박한 것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지만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배신의 정치’ 발언으로 요약되는 비박계(非朴系) 항명 사태가 결국 막을 내렸다. 여하튼 새누리당이 이번 공천과정에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계파별 몰아내기식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특히 계파가 다르고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후보자를 총선 진영에서 축출하는 것은 더욱 비민주적이다.

새누리당은 이 총선에서 야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180석은 무난하고 잘하면 200석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한 만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역대 보기 드문 공천형태를 보였다. 아무리 야권이 분열돼 있어도 여당이 현 상태로는 목표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만 매달려 최악의 공천을 자행했다. 새누리당의 핵심이나 청와대에서는 야당이 지금 분열된 상태이니까 이번에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은 일부 당선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겉으로는 골고루 배치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권의 내부에 작동하는 어떤 매커니즘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새누리당의 공천은 막장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당으로는 최악의 공천의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경선방식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상향식이 기본원칙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하나 물갈이 실상과 관련해서는 대구의 경우에 상당수가 교체가 됐는데 대구는 100% 인위적인 숙아내기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생명에 위기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제20대 총선을 위한 당내 공천이 마감되기 하루 전에 당대표 김무성이 공천관리위원장 이한구의 일방적 공천결정에 항의하여 당 대표 직인을 찍지 않겠다고 대표 자리를 떠나버리는 추태를 연출하고 말았다. 집권여당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막판에 무공천 카드를 꺼내 유승민 의원을 사실상 살려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부 만회를 했다. 그래도 진박 공천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작용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결국 유승민을 쫓아냈고, 유승민은 탈당과 동시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마지막까지 일명 ‘옥새투쟁’을 벌여 결국 3곳(대구 동구을, 서울 은평구을, 서울 송파구을)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게 했다. 유승민 의원의 정면승부는 하룻밤 만에 이상한 결론으로 귀착됐다. 김무성 대표가 대구 동구을 무공천을 목표로 ‘옥새투쟁’을 시작해 관철한 것이다. 그 결과 대구 동구을 이재만,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송파구을 유영하 등은 당 공천이 무마되고 또 무소속 출마도 못했다. 이러한 공천 막장드라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유승민 의원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여론에서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일주일을 넘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공천위에 의한 공천방식에서 공천위원장의 권한은 너무 막강했다. 공천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공천위는 이재오, 진영, 이종훈 등의 비박계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단수, 우선 추천하거나 경선후보로 추천했다.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단수, 우선 추천하거나 경선후보로 추천한 결과에 대해 최고위를 통해 공천을 보류시킴으로써 김무성 대표와 친박, 진박 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커진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은 당 대표로서 당헌, 당규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여 결국 공천위의 공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비박계 의원들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 양측의 골이 최고조로 깊어지게 됐다. 이한구 공심위원장과 김무성 당 대표간의 갈등의 상황과 오가는 발언들을 통해 보자면, 공천결정과 선거직전까지의 선거 전 시점에도 여러 잡음은 불가피했다.

여하튼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공천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려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근혜(親朴)계의 살바싸움 성격이 짙다. 친박의 좌장격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친박과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한 이들, 이른바 진박과 친박은 물론 자신의 개인적 친소관계까지 감안한 인사들의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진실한 사람’의 구분법을 설파했다. 바

로 TK에서 자신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좌장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것이다. 여기에 임기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청와대의 관심이 공천 심사에 투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띠었다. 그 결과는 친박의 신승, 김무성 대표의 실리로 요약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 결과만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측 의원들과 옛 친이(친이명박)계가 사실상 몰락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친박(친박근혜) 대 친김(친김무성)’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천자 세력 분포는 대체로 친박과 비박(비박근혜)이 각각 130명, 1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역구 253곳 중 중립 성향 등을 보이는 후보자 약 20명을 제외한 수치다. 제19대 국회에선 수적 열세로 비박계에 밀렸지만 제20대 국회에서는 친박 후보들의 여의도 입성 숫자를 최대한 늘려 당 주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친박계 신(新)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의 세력화가 눈에 띈다. 최경환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할 수 있는 공천자는 6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의 제1야당을 탈당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김종인을 영입하며 문재인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때 썼던 ‘새정치’란 단어를 폐기한 것이다. 여전히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의 결단인지, 아니면 김종인의 타협내지는 노욕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다. 이른바 7인 비대위원이 선거조직의 첨병이며,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 19인의 선대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낙점했다. 그리고 홍창선 위원장에 정장선 총선거기획단장을 중심으로 공관위원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조직은 문재인 전 당 대

표가 떠나기 전에 만든 “뉴파티(New Party) 위원회”라는 것이다. 이 조직은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참석한 상태의 출범회의에서 아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세력을 호남, 친노(親盧), 운동권으로 규정하고 운동권 중에서 기득권화된 인사들의 퇴출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조직의 핵심적 가치는 문 대표의 당 혁신을 지지하나 이른바 친문그룹이 되지 말자는 것이었다. 문재인이 만든 이 위원회는 문재인이 떠난 상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물갈이를 이끄는 조직이 되는 셈이다. 결국 김종인 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뉴파티 위원회라는 그림자와 함께 움직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돌이켜보면,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 추락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로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탈당을 할 것인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당시 큰 이슈였던 박영선 의원이 거취문제를 매듭짓고 탈당 흐름을 멈추게 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지지율을 10%정도 끌어올렸고, 반대로 국민의당은 자충수를 거듭하면서 10%대 초반까지 추락을 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과 1:1로 맞붙을 수 있는 상황까지 근접 했다.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 것이 신의 한 수이고 그 신의 한 수를 둔 사람이 문재인이라 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자기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면 다른 사람도 많을 것인데 왜 하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간판역할을 했던 인물을 데려왔을까. 그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총선과 대선까지 끌고 가면 굉장히 유리할 것인데 지금 야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으니 김종인 대표를 모셔 온 것이다. 결국 이번 공천도 문재인 대표를 위한, 철저한 문재인용 공천이지만 이것을 김종인 대표가 과감한 개혁공천을 하면서 새누리당보다 낫다고 보이도록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런 파동이 나면서 친노의 스타일과 한계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결국 문 전 대표는 친노의 색채를 김종인 대표의 강한 개성으로 감추고 김종인을 앞으로 드러내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됐던 이유의 하나는 당헌 위반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대표의 공천권한을 무한대로 확대해버린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공천에 올라온 인사들이 논란에 휘말릴 만큼 애당초 부적격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났던 것은 김종인 대표가 민주적인 리더십과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김종인 대표의 권위적인 리더십이 이번 총선뿐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과연 야당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김종인 대표와 결별을 하면 이것은 파국을 의미하고 이번선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래고 봉합하려는 것이었다.

어쨌든 공천과정에서도 김종인 대표는 자기 칼라를 상당히 드러냈다. 그의 첫 일성은 친노와 운동권 정당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일정 정도 이뤄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외견상 친노 운동권 일소와 범친노(凡親盧)로 여겨지는 정세균 계의 몰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을 낙천시켰고, 86세대(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가운데 ‘과격한 언행’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던 정청래 의원도 낙천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친노 운동권 배제 이면에는 문재인 대권가도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정세균 계의 몰락이 뚜렷했다. 전병헌, 오영식, 강기정 등 3선 이상 중진의원이란 이유로 낙천한 이들이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정세균 계 인사들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의원까지 포함하면 친노 주류에 이어 당내 다수파를 점하던 정세균 계가 사실상 몰락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친노(親盧)가 친문(親文)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문재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으로 기울었던 지지세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행한 사천, 자천, 정실공천의 사례이다. 첫째는 김종인 대표는 정청래 의원을 찾아뵙시켜 지지자들의 반발이 일자 정청래 의원의 제안으로 손해원 홍보위원장을 공천했는데, 왜 손해원을 마포울에 전략공천했는지 당 공식 창구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다. 그렇다고 제19대 때 정청래 후보에 박빙의 표차로 당내경선에 패배했던 정명수 예비후보

가 ‘손혜원과 경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둘째, 오영식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경우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박영선 의원이 당권 근처에 다가가는 순간 오영식 전 최고위원의 낙천은 확정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지난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직을 내던졌던 오영식 의원은 3선 이상 50%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낙천의 고배, 정치보복의 쓴잔을 들이켰다. 셋째, 분당을에서 여러 해 동안 표밭을 일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선도 못하고, 느닷없이 손학규계 후보에 의해 주저앉았다. 이 또한 손학규계 정당선 단장의 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여기 또한 전략공천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없다. 정장선 총선거획단장의 어이없는 사천(私薦)이고, 자파공천이니 사실상 자천(自薦)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자 새누리당 의원비서관 출신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저열한 권력 행사인 ‘사천’을 하려다가 들켜서 모든 공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시켰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자신을 후보 2번으로 ‘셀프공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의 비례대표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일부 조정하는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당무 거부로 더불어민주당은 혼돈에 휩싸였고, 결국 ‘셀프공천’ 논란 중심에 있던 김종인 대표를 ‘돌고돌아’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확정했다. 김종인 대표의 이른바 ‘셀프공천’ 논란으로 촉발됐던 당 내홍이 김 대표의 잔류로 사흘 만에 일단락됐다. ‘노욕(老慾)’이라는 비난에 모욕을 느꼈다며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었던 김 대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문재인 전 대표의 만류 등으로 사퇴 의사를 접어 상황이 일단락됐으나, 총선 이후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2번을 선택한 자신을 두고 셀프공천이라는 비판으로 사태를 키운 비노·운동권 세력을 겨냥한 강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만큼이나 악재였다.

결과적으로 현역의원 공천심사 결과를 보면 오랫동안 당의 주도세력을 형

성했던 정세균 계와 친노(친노무현)계 중진 의원 다수가 정치권 물갈이라는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친노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지만, 좀 더 세분화된 '친문계' 사람들은 당내 경선 등 공천과정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측근들의 행태가 야권에서 가장 큰 취약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실세인 '1김3선'(김종인과 박영선·정장선·홍창선 등)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전략공천, 사천, 밀실공천, 정실공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막장드라마 같은 파행공천은 원래 그렇다 쳐도, 소위 민주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공천들, 사천, 자천의 작태를 보면, 지금부터라도 당원과 지지자의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치열한 자기고민과 투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선 까닭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 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급격히 친노(친노무현)와 86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이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겠다'는 판단과 함께 대권의 꿈 실현에 따라 제 갈 길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120일을 앞두고 탈당, 50여 일 만인 2016년 2월 2일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취약한 지지기반을 보완하고자 호남을 기반으로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섰던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아야 했다. 그래서 안철수 등 탈당파들이 제3당을 창당하면서 새정치 구원을 내세우며 호남의 천정배, 정동영, 권노갑, 김한길, 박지원 등을 끌어들이 제20대 총선에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존재와 면면을 정치적 변수로 봐야 한다.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시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의원과 합류하는 인사들이 줄어 제1야당과의 경합에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득권 양당구조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당으로 출범했으나,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공천과정, 당 운영 과

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처음보다 오히려 축소된 감이 있다. 그러나 2월초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행사를 가졌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성패는 역시 호남의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이건 선거전 양상이건 호남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남이 장악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전혀 없다면 그 또한 문제다. 전국구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당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건 분명하다. 여하튼 제20대 총선이 3당 체제를 중심으로 치열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게 됐다.

국민의당은 공천을 앞두고 창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드러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맡았다. 그리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은 2016년 2월 4일 전윤철 전 감사원장으로 결정되었다. 당규제정 및 경선규칙 공동업무(task force)는 박주현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위원장과 박 최고위원 모두 천정배 대표가 주도한 국민회의 출신이다. 그리고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여하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가 출범했다는 것은 공천경쟁이 최소 2배 이상 치열해졌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는 볼 수 없던, 공천을 둘러싼 몸싸움이 국민의당 공천 과정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로 꼽혔던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문제다. 당의 이미지 쇄신과 호남 공약을 위해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남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공천되면서 '혁신'이 실종됐다. 현역 6명의 지역구 의원 중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천정배, 박주선 등이 단수추천과 숙의배심원제로 공천을 받았다. 결국 혁신은커녕 더 심한 조직선거가 돼버렸다.⁷⁾ 결국 물갈이 폭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훨씬 뒤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당에서는 '혁신'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린 그 '혁신적'이라는 제도의 결과는 그다지 혁신적이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2016년 3월 18일 저녁 광주 북구갑 지역구를 시작으로 19일 서구갑, 광

7) 한겨레 2016/01/17.

산구갑, 북구을과 20일 광산구를 동구·남구갑 경선 등 광주 지역에서 지역민과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숙의배심원단이 '숙의'로 투표해 공천자를 결정하는 경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난입해서 몸싸움을 하는 지경까지 보이면서 국민의당이 공천과정을 반등의 계기로 삼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의당은 대구경북, 경남, 강원, 부산, 경기 등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영남과 강원에서는 후보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정당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지역정당적인 모습에 머물고 말았다. 수도권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이 취약해서 절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국민의당이 경선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인데 아무리 신생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경선과정을 보면 너무 비민주주의적 구태를 보여줬다. 특히 숙의배심원제 경선이 진행되는 시간에 이상돈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에 가서 자기 비례대표 면접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경선과정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리고 광주의 정용화의 경우 한나라당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천을 줬다가 다시 뺏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정용화 후보는 당사에 찾아가 항의하며 도끼 시위까지 나오게 만든 부분은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 게다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 후 공천에 탈락한 현역의원이 당 최고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 대표는 황급히 국회를 빠져나가는 등 공천파동은 비민주적이었다. 그나마 국민의당 공천 과정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던 까닭에 비난 여론이 덜한 편이다.

한편 공천 막판에 공관위 위원들이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 사퇴하고 갔는데 모두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이다. 그런 부분은 국민의당이 이야기 하는 가치를 스스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당이 이태규 본부장 등의 비례대표 신청을 묵인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선 안정권이 4~5위 안에 배치될 경우 '안철수 사당화' 논란은 더욱 증폭된 것이다. 문제는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당규 48조2항은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 것을,

안철수-천정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확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서 당규 48조2항을 삭제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국민의당은 논란이 돼온 당규 48조 2항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이다.⁸⁾ 최고 위원회가 관련 당규를 '만장일치'로 삭제하면서 '죽었던' 당사자들이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막판 당규 개정으로 이태규 본부장과 임내현 부총장이 후보자격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각각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진통 끝에 양측 인사를 모두 전진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⁹⁾ 전문성 체고라는 비례대표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 결국 국민의당 일부 공천관리 위원들의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위해 당내 인사들이 당규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시끌벅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혼란을 관통하는 중요 핵심은 밀실공천을 통한 측근들 챙기기라 볼 수 있다. 특히 막판 도끼시위와 비례대표 친안철수계 공천 파동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IV.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에 의한 선거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대신한 김종인 대표는 야권분열로 총선 기간 내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 대표는 야권분열의 씨앗으로, 김종인은 야권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로, 모두 새누리당의 거대화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선 선거결과 두 대표의 야당분열은 오히려 여소야대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 꼴이 되었다. 물론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함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은 받은 것에 대한 어부지리였지만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 되었고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 지지율에서 원내 제1당을 넘어서는 득표를 얻었다.

8) 뉴시스 2016/03/23.

9) <http://blog.daum.net/jjsyys/34>;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62225> (2017. 1. 17 검색).

1. 새누리당

새누리당 공천과동이 총선 결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투표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진박 또는 친박 후보들이 총선에서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친박의 무리한 공천과정이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국민과 당원을 무시한 공천으로 말미암아 진박후보들도 본선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국민적 여론은 친박을 선택할 수 없는 결과였고, 전체적인 총선결과로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이 의도했던 총선 승리가 아닌 완전한 패배였다. 즉 막상 총선 뚜껑을 열어보니 여소야대의 결과를 보여줘 새누리당 공천 결과는 친박 또는 진박의 일방적 필패라 할 수 있다.


야권 분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친노(親盧) 패권주의에 대해 많은 야권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돌아선 상황인지라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압승은 예견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야권의 분열로 여당이 여유있게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리라 예견되었던 선거전 분위기와는 달리 새누리당은 과반은 커녕 제1당마저 한 석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첫째, 김무성 대표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다 당을 재건하기 위한 구심점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이후를 떠받칠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이 모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역구 당선자 105명의 계파 성향을 분석한 결과 친박계는 68명으로 비박계(37명)의 2배 가까이 많은 상태로, 당내 주도권을 앞두고 양측 간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비대위가 내년 대선을 치를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대위원 구성을 놓고 계파 간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이번 총선은 총선참패의 결과 철옹성 같았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40%의 지지율이 무너졌다. 특히 경북과 경남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크게 무너졌는데, 새누리당의 지지율 대부분은 국민의당으로 갔다. 제3당으

로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현실화 된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 입법에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오만한 인식으로 국회의 물갈이론을 펼쳤으나, 여소야대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친박 친위부대’라는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여소야대’ 국회와 불통하며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세력 분포 4·13총선 지역구 당선자. 	
친박(친박근혜)계 68명	비박(비박근혜)계 37명
최경환 그룹 최경환 김광림 유재중 조원진 김상훈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박덕흠 윤재욱 이완영 이장우 강석진 곽상도 윤상직 정중섭 추경호	김무성 그룹 김무성 이군현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김학용 이진복 홍문표 박명재 오신환 이은찬 하태경 박성중
친박 중진 그룹 서청원 원우철 이주영 정갑윤 김정훈 유기준 정우택 정진석 한선교 홍문중	유승민 그룹 김세연 이혜훈
범친박 이정현 이철우 이혜재 경대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선동 김성찬 김중태 박맹우 박인숙 배덕광 유익동 윤영석 이우현 이종배 이채익 이현재 정용기 주광덕 함진규 홍철호 객대훈 권석창 김석기 김정재 민경욱 박완수 박찬우 백승주 성일중 송석준 염용수 이만희 이양수 이은권 장석준 정우섭 정태욱 지상욱	새신 그룹 김용태 홍일표 황영철
	비박 중진 그룹 심재철 정병국 김재경 나경원 신상진 조경태
	범비박 박순자 여상규 이명수 이종구 김한표 염동열 정양석 김성원 윤한홍 정문천 최교일

출처 : 동아일보 2016/04/16.

넷째, 친박(親朴)이 주도해 공천파동을 야기했음에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살아남은 세력도 친박이다. 특히 핵심 친위부대(이른바 진박)은 대부분 생존했다. 반면 포스트 박근혜를 이끌어갈 대선후보급 주자들이 모두 몰락할 상황에서, 당내 ‘비박계’는 새누리당 내 입지가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친박 중심 공천으로 당내 세력은 급속히 축소했고, 탈당파 비박의 생존율도 낮은 상황에서 운신의 폭은 넓지 않을 것 같다.

다섯째,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원내에 대거 입성하면서 최대 계파를 이루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친이(親李)계와 비박(非朴)계를 정조준 했던 결과가 현실에 반영된 셈이다. 공천 파동으로 역풍을 맞은 새누리당이지만 대구·경북 지역 친박 인사들은 여전히 지지를 받아냈다. 오히려 수도권 비박 인사들이 공천 파동의 희생자가 된 상황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재오 정두언 의원이다. 수도권 비박 세력의 핵심들은 줄줄이 낙선하면서 사실상 비박계의 중심을 잡아줄 중진이 보이지 않는다. 비박계 중에서 김무성계가 그나마 1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 대항마로 여겨진다.

여섯째, 새누리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가운데, 공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총선 후 자신이 맡고 있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위 의장은 당 비대위 구성의 최종 결정권자다. 전국위원회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을 확정지어야 할 의결기구다. 공관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막가파식 공천 책임' 논란에 직면했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총선 패배로 새누리당 권력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총선참패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여론의 역풍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여소아대정국으로 박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등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다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등 '국정동력 누수'조짐이 보이는 분위기다.

김무성 당 대표는 '옥쇄 파동'의 장본인으로서 총선 패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게다가 김무성은 유승민의 복당 여부와 그 정치적 역량이라는 '변수'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됐다. 무엇보다 친박 중심 공천으로 당내 세력은 급속히 축소했고, 탈당파 비박의 생존율도 낮은 상황에서 운신의 폭은 넓지 않을 것 같다. 김무성은 박근혜와 더불어 새누리당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싶다. 다만 경선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주호영, 장제원 등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복당이 이뤄질 경우, 당내에서 비박계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는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개인으로선 승리했지만, 당내에 남아 경선을 거쳐 살아남아 당선한 이혜훈 등을 제외하고, '유승민계' 대부분이 낙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한구 의원의 정반대 쪽에 선, 새누리당을 쇄신할 유일한 '정당성'을 확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새누리당 복당과 정치적 입지를 새누리당이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당사자로 지목된 무소속 유승민 당선자의 복당도 논란거리다. 유승민 당선자가 복당한 뒤 당내 비박(非박근혜)계와 세력을 합칠 경우 친박(親박근혜)계로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 외 오세훈/김문수/안대희 등은 총선실패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대선후보 경쟁에선 완전히 '컷오프' 됐다. 특히 잠재적 차기 대선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공천을 받은 측근 인사들이 소수에 그쳐 당내 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승리하여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됐다. 따라서 제20대 국회 최종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으로 선전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전체 122석의 3분의2에 달하는 80여 곳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호남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123석으로 선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49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35곳, 60석이 걸린 경기에서는 40곳에서 이겼다. 결과적으로 목표치였던 107석을 초과한 만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몰락했다. 결국 호남에서의 반문(反문재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김종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와 새누리당 때문이다. 일례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에 밀린 건, 김종인의 총선 전략(중간층 공략)이 유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다.

제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범친노 및 친문 그룹이다. 범친노와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 지사의 측근 그룹들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영역을 확장한 손학규 계와 총선 승리를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룹은 비주류를 형성할 수 있다. 친노·친문 그룹 의원만 따져도 약 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인사가 20대 원내에 들어서면서 세력을 크게 늘렸다. 문 전 대표는 원외이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일단 권력의 힘은 김종인에게에 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저력은 제20대 국회 초반까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필패론'이 허구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절대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주장¹⁰⁾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보다 5석 더 많이 당선되어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 대구에서도 1석이 당선되어 영남에서 새누리당의 독점구조를 깼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호남 없이도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호남 패러독스', '호남의 역설'이다.¹¹⁾ 호남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토하면 몰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호남의 맹주의 자리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뺏아가는 했지만, 여전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은 만만치 않다. 다만 이번 총선이 보수층이 대거 기권하거나 국민의당을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면¹²⁾ 진보야권의 영남권 약진현상이 앞으로 지속될지도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이번 총선 결과는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주장한 창당의 명분, 호남의 일부가 주장한 '문재인 필패론'의 명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더 이상 호남이 민주진영의 대주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 총선 결과는 전국의 2040세대가 민주진영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¹³⁾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의

10)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570349&bbsId=K161&pageIndex=1> (2017 2. 5 검색).

11) 오마이뉴스 2016/04/17.

12) <http://egloos.zum.com/whaedra/v/5297377> (2017. 1. 10. 검색).

13) 오마이뉴스 2016/04/17.

세대가 보여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힘, 더구나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원동력이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야권의 지지층과 20,30,40 대의 젊은층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들을 끌어 들여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바꿀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력 분포 4·13총선 당선자.

친문재인(친노무현)
 문희상 원혜영 설훈 추미애 김태년 홍영표 김현미
 전해철 윤후덕 서영교 남인순 진선미 박남춘 윤관석
 박범계 김경협 이학영 윤호중 김상희 백재현 민홍철
 도종환 고용진 박주민 손혜원 김병기 최인호 김해영
 김병관 조용천 김한정 김정우 표창원 김경수 서형수
 강병원 황희 박재호 전재수 이재정 재운경 이용득
 정춘숙 문미옥

친안희정
 조승래 정재호 김중민

친정세균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안규백 김영주 이원욱 송옥주

친송영길
 송영길 유동수 신동근 박찬대



86그룹
 이인영 우상호 박원주 홍익표
 박홍근 유은혜 김민기 기동민 김현권

친손학규
 양승조 오재세 조정식 우원식 이찬열 이춘석 이개호 전현희
 이언주 전해국 김병욱 강훈식 어기규

친김종인
 진영 최명길 박경미 최운열

기타
 이종걸 이석현 박영선 김부겸 이상민 안민석 강창일 변재일
 심재권 김영춘 유승희 민병두 노웅래 정성호 인재근 한정애
 신경민 박광은 박용진 김영호 금태섭 백혜련 김영진 김철민
 신창현 박정 권철승 소병훈 임종성 송기현 안호영 오영훈
 위성곤 이훈 김두관 이철의 김성수 권미혁

출처 : 동아일보 2016/04/16.

그렇다면 총선 승리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권력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가 선거 전 광주에 내려가 한 약속(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은 자승자박의 모양새가 됐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리더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다. 문재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상당수 후보가 당선했고, 표창원, 박주민 등 상징적인 외부 영입 인사도 무난하게 당선됐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김종인이 대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조직’과

‘대중’(인기)이라는 칼과 방패를 갖췄다.¹⁴⁾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김종인이라는 ‘외부 영입 전문 CEO’를 어떻게 대체하고, 조직을 쇄신할지, 또 자승자박의 약속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문재인에게 남겨진 숙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 기간 실질적인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해 ‘차르’(tsar)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여전히 김종인의 정체성은 ‘구원투수’다. 문재인은 한시적으로 ‘외부’인사를 불러와 총선이라는 특별한 이벤트의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 김종인에게는 문재인에게 있는 조직과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¹⁵⁾ 그에게 ‘총선 이후’ 대선을 기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없을 것이다.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당 대표 합의추대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이나, 앞으로 김종인의 입지는 그 한계가 자명할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종인을 당 대표로 유력시 보는 측면이 있으나 반대 여론도 많아 향후 당내 논란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친노(親盧) 진영을 비롯한 각 계파의 수용 여부다. 친노 진영 내부에서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한 일부 불만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는 향후 당 대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선관리 책임자로 남을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김종인 대표체제 하에서 공천탈락 후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바, 이에 대한 김종인 대표와 이해찬 의원 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은 당선 직후 “곧바로 복당해 김종인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종인 대표 측은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다시 당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¹⁶⁾ 이번 인선을 통해 김종인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당의 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친노·86그룹의 반발이 변수다.¹⁷⁾ 당장 양측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의 복당과 차기 전당대회 문제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변화는 손학규계의 확장이다. 손학규 전 고문은 김종인 대표의 총선 지원 유세를 거절했음에도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당선

14) slownews.kr/53310/amp (2016. 8. 20. 검색).

15) slownews.kr/53310/amp (2016. 8. 20. 검색).

16) <http://bomulsum.tistory.com/4636> (2016. 12. 8. 검색).

17) 동아일보 2016/04/16.

되면서 당내 영향력을 키우게 됐다. 손학규계 당선인들이 10여명 당선된 이 총선에서, 손학규 전 고문은 정계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그는 정계 복귀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 기대와 달리 선거기간 당시 당의 지원유세 요청을 외면한 것이 걸림돌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학규계와 김종인 대표 측의 연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6선을 성공한 정세균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정세균 의원의 경우 자신의 계파인 전병헌·오영식·강기정·김성주 의원 등이 컷오프 또는 낙선을 당해 타격을 받았지만, 종로에서 대권주자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꺾으며 당의 간판으로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에서 25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른 정당별 득표에서는 13석을 얻어 총 38석의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당은 돌풍 수준으로, 호남을 싹쓸이하며 내심 기대했던 40석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2석에 그쳐 전국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기에는 다소 못 미쳤다. 3당 체제가 공고화 될 경우 제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구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의 힘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간의 줄다리기에 있어 미래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한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당은 호남 28석 중에서 23석(더불어민주당 3석, 새누리당 2석)을 가져갔다. 의석수만으로는 국민의당의 압승이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당 46%로 9%p 차이(광주 34%~56%, 전북 39%~42%, 전남 38%~44%)였다. 호남맹주의 자리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뺏어가는 했지만, 여전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호남의 경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호남야당으로 대체됐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생긴 그 근본 원인이 결국 호남 민주화 세력과 친노세력 간의 갈등 끝에 비노(非盧)진영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으로 대거 가버린 결과이다.

20대 총선 국민의당 당선자 계파 분석

 국민의당

구분	이름	계파	노선	구분	이름	계파	노선
1	서울 안철수	안철수계	제3당 노선	20	전남 주승용	김한길계	야권통합 노선
2	서울 김성식	안철수계	제3당 노선	21	전남 손금주	안철수계	
3	광주 장병완	친안철수	탈당파	22	전남 정인화	안철수계	
4	광주 박주선	박주선계	탈당파	23	전남 황주홍	친안철수	탈당파
5	광주 송기식	안철수계		24	전남 윤영일	안철수계	
6	광주 천정배	천정배계	야권연대 노선	25	전남 박준영	박지원계	야권통합 노선
7	광주 김경진	친천정배	야권연대 노선	26	비례 신용현	안철수계	전문가 인재영입
8	광주 최경환	안철수계		27	비례 오세정	안철수계	전문가 인재영입
9	광주 김동철	손학규계	탈당파	28	비례 박주현	천정배계	
10	광주 권은희	친안철수	탈당파	29	비례 이상돈	안철수계	제3당 노선
11	전북 김광수	안철수계		30	비례 박선숙	안철수계	제3당 노선
12	전북 정동영	정동영계		31	비례 채이배	안철수계	
13	전북 김관영	김한길계	탈당파	32	비례 김수민	안철수계	
14	전북 조배숙	안철수계		33	비례 이태규	안철수계	제3당 노선
15	전북 유성업	친안철수		34	비례 김삼화	안철수계	
16	전북 이용호	안철수계		35	비례 김중로	안철수계	
17	전북 김중희	안철수계		36	비례 장정숙	안철수계	
18	전남 박지원	박지원계	야권통합 노선	37	비례 이동섭	안철수계	
19	전남 이용주	안철수계		38	비례 최도자	안철수계	

그래픽: 유정수 디자이너

출처 : blog.naver.com/kchanej/220686446480 (2016. 7.18 검색)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호남은 왜 더불어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당을 지지 했을까? 그것은 '문재인 비토' 감정 때문이었다.¹⁸⁾ 바로 그 '문재인 비토' 감정 때문에,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박근혜 심판'이 선거 쟁점이었을 때, 오로지 호남에서 야권의 허파역할에선 '문재인 심판'이 선거 쟁점이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도 다른 모든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는데 반해 오로지 호남만이 문재인 전 대표를 심판한 것이다. '문재인 비토론'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겨가서 이번에 당선된 호남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되고 증폭된 것들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호남홀대론', '호남차별론'과 같은 정서적인 것이었던 반면, 겉으로 주장되는 명분은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재인 필패론'이었다. 즉,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절대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문재인 비토론'의 명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 결과는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주장한 창당의 명분, 호남의 일부가 주장한 '문재인 필패론'¹⁹⁾의

18) 오마이뉴스 2016/04/17.

명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돌풍을 몰고온 국민의당 권력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철수 대표는 야권분열의 원흉에서 여소야대 3당 체제의 캐스팅보터로 부활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멸하다시피 한 총선 성적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현실적인 한계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에 지친 ‘중간층’의 존재를 비례대표 정당 득표로 입증했고, 2.5 정당체제에서 0.5로 캐스팅보터가 가능할 만큼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여야 1 대 1 구도로는 새누리당을 절대 못 이긴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²⁰⁾ 이번 총선 정당득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지만 현재 규모를 적용하면 국민의당 후보가 덩치 큰 정당 후보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천정배 의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맹주로 안철수 대표보다 호남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당선 후 새누리당과 이명박-박근혜 전현직 하에 벌어진 적폐를 청문회로 이끌려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호남 지역 공천과 야권연대 논란에서 안 대표와 계파갈등을 빚었으나 공천 과정에서 상당수의 천정배계 후보들이 탈락해 당선자 중에 천정배계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천정배계 몫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박주현 당선자 정도가 손꼽히며 광주 지역에서 당선된 김경진 당선자 정도가 천정배계로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V. 함의 및 요약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형국인 점에서 야권의 승리였다. 물론 국민의 선택은 여도 야도 일방적 승리를 보내지 않았지만,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고 제1당의 위

19) www.pppm.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879&no=4695. (2016. 5. 10. 검색).

20) 한국일보 2016/04/19.

치에 서지 못한 것은 여당의 참패였다. 아니 집권 새누리당을 실제 컨트롤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작이었다. 선거 과정에서는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예상되었던 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165~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²¹⁾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파행과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여소야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에 있어 제1당으로 등장한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독주, 새누리당의 오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박(眞朴), 이 판을 뒤집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라간 새누리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용에 근본 원인이 있다. 즉 공천 과정에서 ‘친박 패권주의’²²⁾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 주류가 독단적 행태를 보이자 전통 보수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당으로 옮겨간 데 그 원인이 있다. 요컨대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공천파행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려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와의 경쟁속에서 표출되었다. 여기에 임기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이 공천 심사에 투영²³⁾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외견상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이한구 공천 관리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면서 공천 내내 친박 주도의 공천이란 인상을 줬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외견상 친노 운동권 일소로 압축할 수 있다. 제20대 총선 공천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대권가도를 닦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한 뒤 차도 살인 격으로 당내 경쟁자의 수족을 모두 잘라내듯이 하였다. 국민의당 또한 후보주자로 비공천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파별 정실공천으로 당내 민주화와

21) 경남신문 2016/04/13.

22) <http://ralra.kr/973> (2017. 1. 30. 검색).

23) 친박·비박으로 구성된 새누리당이 ‘특정 개인 중심의 사당화’(정주신 2004, 459) 탈피에 따른 내용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동떨어진 반개혁적 공천이었다. 이처럼 기득권을 가진 여야정치세력들은 파행적인 공천을 해놓고 국민들한테 표를 요구한 셈이니, 이런 뻔뻔한 정치관행을 어떻게 혁파해야할 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비난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의 미래 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하튼 이번 총선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의 역할이 축소되고 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동력도 상실하게 된 만큼 정치력 축소는 물론 당내 장악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당인 새누리당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당의 막장 공천이 있기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청산 운운과 함께 일방통행 국정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라는 환경에도 참패를 당한 이면에는 지난 3년여 간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역행, 경제 실정 등에 대해 민심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약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야당의 입법 지연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유권자나 지지층을 화나게 했다. 결국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부도덕한 공천파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선전했지만 호남에선 참패했다. 선거 막판 호남행을 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²⁴⁾고 했다. 그러나 호남 유권자들은 친노(親盧)패권주의에 대한 거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결국 제20대 총선의 태풍은 호남으로부터 투표일을 불과 2~3일 앞두

24) 연합뉴스 2016/04/08.

고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로 정부여당의 실정과 호남에서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노패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 호남과 충청 및 수도권에서 제3당에 대한 기대(정태일 2016, 15)와 함께 정당투표에서 야권의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에 투표를 한 것이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구 총 28개에서 과반을 훨씬 웃도는 23석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28석 중 23석으로 압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참패였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했으니, 새누리당이 잃은 의석수와 국민의당이 얻은 의석수가 엇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승리를 하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승리로 새누리당에게 패배를 안기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야권 분열보다 정권 심판, 즉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공천파행 행태에 패배를 안기면서 야당에 표를 몰아준 셈이다.

그러나 유독 총선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였다. 공식적으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각 당의 대표보다도, 현 정부를 대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국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설정했기에 '대통령'이 부각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광주 방문 관련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친박, 진박하며 공천에서 선점을 차지하려 했던 욕심은 역풍을 맞게 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에서의 영토회복은 기우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권력'은 누가 될 것인가가 초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는 총선이후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이 조기에 등장하는 계기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제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정국의 핵심 기류가 미래권력으로 흐를 것임을 감안하면 여야 대선구도가 균용할거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건은 진박 인사들의 생존 여부와 권력승계일 것이다. 진박계가 절실한 사람은 정권승계 끝까지 그들을 비호해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반면 야권도 분열된 상

태에서 정권교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여소야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을 고려할 때, 야당에 권력이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인다. 허나 총선이든 대선이든 국민을 무시한 정치로 일관하고 기득권유지에 혈안인 세력들에게는 국민의 표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치권을 휘몰아 돌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정치(政治)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탄핵의 근원인 친박과 비박과의 갈등에서 비박계가 야당의 탄핵에 동조하면서 나타난 결과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당 내분은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이탈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새누리당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후 보수세력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상승효과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 미래권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어쨌거나 제20대 총선과정에서의 공천파동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새누리당의 분열은 물론 제19대 대선도 앞당겨지게 되었다. 결국 당내 민주화가 훼손되고 당 내분이 가속화될 경우 정당의 생명이 단축되고 정권유지 역시 어렵다는 것이 이번 새누리당 사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길정아. 2011.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 민주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1호.
- 길정아이하경. 2009. “한국정당의 분권화와 포괄성에 관한 비교연구: 제18대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2호.
- 김용호. 2003.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 지속과 변화.” 『의정연구』 제9권 1호.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2호.
- 박찬욱. 2000. “결론: 413총선의 정치적 의의.” 김용호 외 『413총선』 서울: 문형출판사.
- 이정호. 2013. “지역주의에 기초한 한국 정당의 공천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1호.
- 이준한. 2003.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의정연구』 제9권 1호.
- 이현출. 2004. “조선의원의 공천과정.” 『의정연구』 제10권 2호.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 정주신. 2004. “한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1호.
- 정태일.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나타난 선거혁명의 비판적 검토” 조선대 동북아 연구소, 『동북아연구』 제31권 2호.
- 조일문. 1971. 『새정당론』 서울: 삼화출판사.
- Hazan, Reuven Y. 2002. "Candidate Selection." In Lawrence LeDuc,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 eds. *Comparing Democracies 2: New Challenges in the Study of Elections and Voting*. London: Sage Publication Inc.
-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 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 Party Politics, vol. 7, no. 3, 297-322.
-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62225> (2016. 10. 10. 검색).
-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74136>(2016. 11. 18. 검색).
- <http://blog.daum.net/jjsyes/19> (2016. 11. 18. 검색).
- <http://blog.daum.net/jjsyes/35> (2017. 2. 20. 검색).
-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60043> (2017. 2. 20. 검색).
- <http://blog.daum.net/jjsyes/23> (2017. 2. 18. 검색).
-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67261>. (2017. 2. 18. 검색).
- <http://blog.daum.net/jjsyes/19> (2017. 2.19. 검색).
- <http://blog.naver.com/jjskips/220961274136> (2017. 2. 19. 검색).
- <http://ralra.kr/973> (2017. 1. 30. 검색).
- <http://egloos.zum.com/whaedra/v/5297377> (2017. 1. 10. 검색).
- <http://bomulsum.tistory.com/4636> (2016. 12. 8. 검색).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570349
&bbsId=K161&pageIndex=1](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570349&bbsId=K161&pageIndex=1)(2017 2. 5. 검색).
- blog.naver.com/kchanej/220686446480 (2016. 7. 18. 검색).
- blog.daum.net/jjskips/20 (2016. 12. 3. 검색).
- 경남신문, 2016. 4. 13. 국민일보, 2015. 12. 19. 뉴시스, 2016. 3. 23.
- 동아일보, 2016. 4. 16. 오마이뉴스, 2016. 4. 17. 연합뉴스, 2016. 4. 8. 한겨레, 2016.1.17. 한국일보, 2016. 4. 19.

투고일 : 2017년 2월 18일 · 심사일 : 2017년 3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22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정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탈북자 문제의 인식 1, 2, 3』(프라마북스, 2011, 2012), 『한국의 정당정치: 군부체제집권당』(프라마북스, 2011), 『10월 부마민주항쟁』(프라마북스, 2014), 『5·18 민주화운동』(프라마북스, 2014), 『6월 항쟁』(프라마북스, 2014) 등이 있다.

<Abstract>

Impl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 in line with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nomin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Chung, Joo-Shin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On December 9, 2016, the decision of impeac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against Park Geun-hye came from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between Pro-Park group and Anti-Park group at the ruling Saenuri Par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on the election result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on the public sentiment of the people.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ruling and opposite parties were a prelude to the victor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it was serious faction conflict. Firstly, the study examined how the nomination conflicts of each party were centered on President Park Geun-hye as well as the leaders of each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nomination committee. Secondly, the study examined what kind of changes would be made to the composi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s for each party at the ti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rdly, the study examined the opposition parties' separation between the Minjoo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s Party of Korea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and the issue of initiative in Hon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20th general election failed to obtain a majority seat of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opposition won and formed the majority. The reason why President Park and Saenuri were greatly defeated in the contest even in the situation where the opposition parties were divided is the root cause in the attitude of Pro-Park group and Anti-Park group who assumed their victory.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o render its responsibility to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s become a 'past power', and it has opened up the possibility that the emergence of future power by opposition parties. In the case of the opposition party, it is clear that the battle for Honam, which is a traditional opposition party's support group, is a matter of good fortune of the two major powers, Moon Jae In and Ahn Cheol Soo.

Key Words : The 20th General Election, Election Results, Nomination Conflicts, President Park Geun-hye, The Ruling Saenuri Part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People's Party